

‘전략·정책통’ 행안장관 후보 윤호중…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 속도 붙나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5선 중진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새 정부의 중점 과제인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5국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의 국가 균형 발전과 함께 민생 회복, 국민 재난안전 확보, 정부 조직개편 지원 등도 주요 과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윤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유연한 소통 능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해관계로 분류되지만 평소 계파색을 잘 드러내지 않아 진명계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주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에 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진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신임 행안부 장관 임명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경찰국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대표적 전략통·정책통… 주요 당직 맡고 선거 이끌어
‘경찰국 폐지’ 우선 추진할듯… 윤호중 “대통령 공약”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완수 관측… ‘비대화’ 우려
국가균형발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협력할듯
정부조직 개편 지원… 행안부 ‘부총리급’ 격상 관심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같이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자의 행안부 장관 지명이 눈길을 끄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트로이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몰에타남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율적이고 역동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이러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노무현·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국3특’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최대 52만원의 민

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서는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고, 최근 복합적인 재난 상황 증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주관 부서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도 과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행안부도 소관 업무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등 세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확대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

된다.

윤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갈등과 잡음도 능수능란하게 조율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윤 후보자의 내정으로 행안부의 ‘부총리급’ 격상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만큼 부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

與 “김민석 인준안 막는 국힘은 ‘민생방해세력’… 자체 청문 법적 조치”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건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농성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원칙 없는 협상·타협은 하지 않겠다’라며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김병기 “전면전 선언… 6월 국회 내 총리 인준 처리”
국힘 ‘자체 국민청문회’ 추진에 “법률위 중심 법적조치 준비”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청년과 탈북민, 전문가 등

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추가 검증하는 자체 ‘국민청문회’를 여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방 놓은 것도 모자라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물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법을 무시해서라도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그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검증

마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총리”라며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에 휘둘릴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국정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김 후보를 음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유포, 각종 망언, 헛다리 짚기 조작 현수막까지 동원을 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이미 김후보자를 인준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몽니를 그만부리고 즉각 총리 인준과 추경 합의로 민생 회복에 동참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

여야, 원내수석 회동 ‘빈손’… 김민석·추경안 대치 지속

여야가 30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일정 등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0여분간 회동했다.

유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취재진으로 부터 회동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백브리핑은 없다”며 이석했다. 문 원내수석도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

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내 김민석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처리,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 단독 인준 등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김 후보자 인준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추경안 일정을 백지화하고 재공하지 않으면 추경심사를 위한 중립정책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조건부 보이콧을 선언했다. /뉴스



유진건설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